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1. 2. 24.

북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규식

1. 제 출 자: 성동구청장

2. 제안이유

자녀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은 ‘출산축하금’으로 제명을 변경하여 출생·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며 서울시 자치구 간 서로 다른 ‘출산장려금’ 명칭을 통일하고, 출생자녀의 순서를 신설하여 지원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나. 영아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고, 서울시 자치구 간 서로 다른 제도 명칭을 통일하기 위한 용어 변경(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안 제8조)

1) 출산장려금 → 출생축하금

다. 지원대상의 범위를 영아로 변경하여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까지 포괄적으로 지원(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라. 출생자녀의 순서 신설로 출생축하금 지원기준 신설(안 제4조)

마. 출생축하금 신청기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안 제5조)

바. 출생축하금 신청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21. 1. 7. ~ 1.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결과, 신설·강화 규제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금’을 자녀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은 ‘출생축하금’으로 변경하여 자치구 간 서로 다른 명칭을 통일하고, 출생자녀의 순서를 신설하는 등 지원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 지난해 우리나라는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에 진입하면서 주민등록제도를 시행한 1962년 이후 처음으로 인구 감소 국면¹⁾이 시작되었으며,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가지려는 계획을 미루는 젊은 층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 인구감소 문제는 더욱 악화될 전망²⁾이라고 합니다.

1) 주민등록 인구는 5천 182만 9,023명으로 전년 대비 2만 838명 감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발표, 2020년 12월 31일 기준)

• 2020년 출생자 수: 27만 5,815명(전년 대비 10.7% 감소)

• 2020년 사망자 수: 30만 7,764명(전년 대비 3.1% 증가)

2) 한국은행이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 보고서(2020년 12월)

- 이에 국가나 각 지자체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도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아동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해 전부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 안 제1조부터 안 제6조 및 안 제8조에 명시된 ‘출산장려금’을 ‘출생 축하금’으로 개정하는 것은 출생을 축하하며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므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제명을 수정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 또한 지원대상 범위를 신생아에서 영아로 변경하여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까지로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기준에 출생 자녀 순서를 신설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지원신청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등 구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강화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본 조례안은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여겨지며, 지역 내 다양한 보육 자원을 키우고 돌봄과 육아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